

투데이 칼럼

공공사업 예방적 공론조사로 주민간 갈등 막아야

현 정부는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탈핵정책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주민간 접이한 이해관계의 갈등이 있고 투자된 공사비용이 많아 계속여부를 결정할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受容性)을 높이는 결과를 이끌어낼 새로운 공론조사 방법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사업의 직접 이해당사자를 뺀 객관적·중립적 입장에 선 기술, 통계,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소통협의회가 참여한다.

공론화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특정 공공정책이 불고 울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민주적으로 받아들여 공론(公論)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찬·반간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닌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론화 소통협의회와 시민참여단은 공론의 학습과 토론으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로서 의견을 낸다. 그 점에서 기존의 여론조사가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로 직감적인 의견을 내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시민참여단은 토론 자료집을 익히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듣고 충분히 토론(숙의과정, 熟議過程) 후 최종조사에 임한다.

그래서 행정주체는 사업시행으로



정상섭
정읍시 초산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 총무

인한 사회적 문제점(이슈)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은 질질 끌려온 공사 중단과 재개를 둘러싼 찬·반측의 갈등이 커진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공공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미국은 행정분쟁해결법,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회와 시설설치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기구는 사회적 합의를 빠르게 만드는 중립적 전문성을 띤 준수법적인 기구로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전문가가 참여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공공정책의 갈등을 해결해 가고 있다. 이렇게 주민의 동의를 통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막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행정주체가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간 갈등발생 예견과 수준을 헤아려 보는 것은 갈등을 가장 적게 하고 줄이는데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기법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시는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2012년 제정하고 2017년 일부 개정했다. 이 조례는 공공갈등 진단과 대응계획 수립, 갈등의 예방과 영향 분석, 갈등 발생 시 갈등의 수준과 이해당사자의 범위, 합의형성 가능성과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주민 의견 또는 입장이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여러 형태로 만나 얘기하고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결론을 내면 그 결론에 서로 동의한다.

동의 없는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찬·반 주민들의 갈등을 낳고 사업 추진을 질질 끌음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불러온다. 아울러 지역 주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좋은 사업으로 되살아나기도 어렵다.

나아가 그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도 맹목적인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정읍시도 이미 제정된 전주, 익산, 완주같은 자치단체처럼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자치단체도 사업시행을 위해 법적·행정적·절차적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관행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논의에 주민참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 주민들의 민도(民度)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미래에 대한 안정성과 수요에 즉응 통한 사업규모와 위치, 환경생태적 측면의 생활환경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는 수준에 와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이러한 인식 및 행태변화에 맞춰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로 정보공개를 늘리고 사업시행 전 정책 학습과정까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학적·체계적 계획수립을 위한 제도보완, 사업결정의 객관성·투명성·민주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회의 마련,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추진할 전문가에 의한 환경성·타당성 검토, 주요 행정절차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제도보완, 주민투표제도 주민들이 직접투표를 통한 입지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 등도 요구된다.

이와 같이 현 정부가 주민간 갈등 촉발 사업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공론 조사방법으로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듯 자치단체도 갈등요인 사업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막아 더 좋은 지역사회로 가는 새로운 변화가 있길 바란다.

독자제언

안전띠 착용 생활화, 선택 아닌 필수

“안전띠는 생명줄”, 안전띠는 나의 가정의 행복”과 같은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는 문구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전띠의 중요성은 과거부터 자주 들어왔고 강조되어 왔지만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운전자 4명 중 1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는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경찰관이나 경찰차량을 보게 되면 순간의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다급히 안전띠를 당겨 매거나 몸에 싣어서 걸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3%를 차지한다. 충돌 또는 추돌 사고로 운전전대에 운전자가 가슴이 부딪히거나 전면유리창에 동승자의 머리 부분이 충격되어 치명상

을 입는 경우 또는 뒤집어지거나 넘어질 때 차량 밖으로 뿜겨져 나가 의식 불명,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안전띠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장구로, 충격력을 감소시켜 치명적인 부상을 막아 주고, 운전 중 불필요한 동작용 방지돼 올바른 운전 자세와 안정감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 준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먼저이다. 단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운전자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줄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는 교통 선진 의식이 필요하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불편하고, 귀찮다고 이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 모두 생활화 하자. 김윤철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자전거 교통사고 원흉 ‘자라니’ 를 아시나요?

‘로드킬’ 하면 생각나는 동물은 바로 고라니이다. 갑자기 튀어 나와서 운전자들이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라니란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거나 어디선가 불췌 튀어나와 교통사고의 위협을 주는 자전거 족을 일컫는 말로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이런 신조어가 나올 만큼 자전거 난폭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위협적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하여 운전자들은 헬멧, 전조등, 후미등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 하여야 하고 이어폰을 끼고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표지와 교통신호에 따라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외의 차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을 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가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 100% 과실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전거리 미확보, 끼여 들기, 자전거 운전 중 전화사용, 보행자 횡단 방해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전거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성인, 노인 등들이 이용하는 정말 좋은 이동수단이기에 때문에 그만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사고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바른 자전거 관련 교육문화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기동대 순경

사설

예산 확보에 사활 걸어라

국감의 계절인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기대했던 만큼의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000억 삭감이 불가피하다. 내년 지자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거라하니, 하는 따위의 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겠다. 도민들이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이다.

거듭 말하고 있거니와 전북도는 긴장해야 한다.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 국회에 눈을 떴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도민의 바람대로 7조원 예산 시대를 열 것인지 궁구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 능동적으로 뛰어라한다. 저번에 도지사과 두 부지사가 내년도 예산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여줬는데 그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무슨 말이나 하면 정부의 예산 차별에 이익을 제해야겠다는 것이다. 국토의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 전북은 지난 수십 년동안 그게 아니다.

현재 전북의 모습은 전국의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나후의 모

습이 뚜렷하다. 이런 모습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맞지 않다. 전북도는 ‘전북 자존시대’를 천명했으므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제 이래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강단을 보여야 한다. 역대 정부의 예산 배분 방식을 보면 지역 차별 의도가 역력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정부와 다르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지만 오늘날 돌아가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전북도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도민의 정서가 어떠한지 헤아려야 한다. 다시 말하기 부끄럽거나 지난날 전북의 경제 성장률은 0%였다. 전국에서 유일한 기록이다. 전북도는 도민에게 밝은 소식을 들려줄 의무가 있다. 오래도록 전북 지역에는 세 계쟁버리 대회 유치 소식을 제외하면 밝은 소식이 전혀 없었다.

전북도는 예산과 관련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해마다 지역 예산이 증액됐지만 그걸 묻기만 하는 수준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거라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전북도는 대폭 증액된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다시 당부하거니와 12월 9일 심의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뛰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전북을 귀농귀촌의 최적지로

자금은 추수의 계절이다. 요즘 비가 잦은 게 좀 그렇지만 10월도 어느새 중순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번에 전북도가 주최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주관한 ‘제3회 전북귀농귀촌박람회’에 대해 복습하는 기분으로 돌아볼 것이 있다. 서울시 양재동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종합전시관 3층 aT 센터에서 있었던 사흘간의 그 박람회는 농민들이 볼 때 그 의미가 컸다. ‘전북도와 만나는 101가지 이야기’ 내용도 그렇고, 많은 유명 인사를 참석해 개막식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것도 그렇지만 거기 참석했던 도지사가 ‘귀농 귀촌의 최적지는 전북’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본보는 추수철을 맞아서 전북도에게 할 말이 있다. 정말로 우리 지역이 귀농 귀촌의 최적지가 되도록 더 많은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하고픈 것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농정 구상을 거듭 밝히면서 농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바른 자전거 관련 교육문화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기동대 순경

했던 그대로이다. ‘보람 찾는 농민’ 제 값 받는 농업 ‘젊은이가 찾는 농촌’이 그것이다. 그래서 다시 또 생각나는 게 있다. 전북도는 오래전에 150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55개 신규 사업도 발굴해 거액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전북도는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면 한다. 삼락농정을 펼친지 이제 수 년이 됐는데 농가 소득은 아직도 제 자리라는 보도라서 많이 아쉬운 오늘이다.

전북도는 농업이 도정 최우선 과제라고 여러 번 밝혔으므로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귀농 귀촌의 중심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는 농민들과 함께 가야만 한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로부터 삼락농정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도 농가들은 그에 별로 공감하지 않았다. 삼락농정의 성공은 도내 농민들이 평가할 일이지 정부가 위에서 내려다 보고 판단할 일 아니다.

앞으로는 실감나는 성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이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귀농 귀촌의 최적지가 되도록 내실있는 행보를 보여주기 바란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